

부동산 민심 다독이기...거래·보유세 동시완화 움직임

당정 1가구 1주택 세부담 완화 이재명 “다주택 양도세 한시 완화” 야권 “부동산 정책 뒤집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여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감세' 모드로 전환했다. 코로나 19 대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 및 주거 불안과 함께 부동산 세금 폭탄까지 이어진다면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천명해 온 부동산 증세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선거용'이라는 역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 협의를 열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일시적 유예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 변화를 주문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읽힌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9일 민주당 서울시의원단과 비대면으로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경하지 않으므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당정이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부

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강력히 반대해왔던 진성준 의원이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고 정책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패라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MBC 라디오에 나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정책이 방향은 맞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했다”며 “정책이란 추진 방향이 아무리 옳아도 역풍과 부딪힐 때는 속도 조절을 해가며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부동산 감세에 힘을 실었다.

이 같은 이 후보와 민주당의 움직임은 부동산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다. 특히 여태껏 선거에서 선전해왔던 서울·경기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 세금 문제만은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아파트 값 폭등을 잡지 못한 여권의 입장에서 부동산 세금 폭탄까지 현실화된다면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3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자칫 급등한 재산세는 대선 표심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민주당은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 세 부담 완화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내년 3월이 되면 구체적인 안들이 더 나올 수 있고 그 전에 더 나올 수도 있다”면서 “2월 중순이 되면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부동산 감세 기조를 ‘말 바꾸기’ 등으로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 후보가) 선심을 얻기 위해 공시지가와 재산세 자체를 동결한다고 얘기를 하는 한편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기로 발생하는 이윤을 모두 다 흡수하겠다고도 한다”며 “과연 이 후보의 재산세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20일)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뒤집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대선 다자대결 이재명 40.3%·윤석열 37.4%

KSOI 조사... 오차범위 접전 리얼미터 윤 44.4%·이 38%

다자대결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앞치락뒤치락하며 혼전 양상을 연출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후보의 아들 도박 의혹과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학력 의혹 등 여야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안갯속 판세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100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40.3%로 윤 후보(37.4%)를 오차범위 내인 2.9%포인트 차로 우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1,2위 순위가 지난주와 달리 바뀌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6%포인트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이 후보는 0.3%포인트 빠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4.6%,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4.2%로 뒤를 이었다.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선 후보는 1.3%였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68.3%는 '배우자 자질이 후보 선

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변은 29.3%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2~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304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전주(12월 2주차 조사, 13일 발표) 대비 0.8%포인트 낮아진 44.4%를 기록했다. 이 후보 역시 전주보다 1.7%포인트 하락해 38%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6.4%포인트로, 지난주 대비 0.9%포인트 더 벌어졌다. 안 후보가 3.9%, 심 후보가 3.2%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다.

이날 공개된 2건의 여론조사는 조사 기간이 두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불거진 기간과 겹친다.

김건희 씨 의혹은 지난 14일 YTN 보도 이후 확산했고, 이를 뒤인 16일 이 후보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 보도가 나왔다. KSOI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한 반면, 리얼미터는 무선(90%), 유선(10%) 임의 전화면접·자동응답(ARS) 방식을 혼용해 두 여론조사의 조사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병상 확충 특단 조치...국립대 병원 중증환자 집중”

“공공 의료인력 최대한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위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해 “국립대병원은 의료 역할을 코로나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방역 위기 극복을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병상 확보의 고삐를 죄고 나선 것으로 그만큼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지난 1년간 진료 병상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등 환자 증가에 대비했지만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기엔 충분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병상 확충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수도권 공공병원 가운데 가능한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의료 인력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대한 투입해 달라”면서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제외한 코로나 진료 관련 전문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중증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해 달라. 내년 2월 말부터 임용훈련을 하는 신입 군의관과 공

중보건의를도 코로나 진료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공공병원이 코로나 진료에 집중해 발생하는 진료 차질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립대 병원 등 민간병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모듈형 중증병상 확충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들에 대해 충분히 재정적 지원을 하고 손실을 보상하라”며 “청와대는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병상 문제를 직접 챙기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